

법사위 ‘李 재판’, 농해수위선 ‘김현지-산림청장’ 두고 충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2주차

與,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제시
野 “李 대통령 재판 진행해달라”
나경원 남평 김재호도 국감 출석
김인호, 산림청장직 ‘셀프 추천’
추천서에 김 실장과 인연 드러내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감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사건이,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인호 산림청장과의 과거 인연이 화두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문제 되고 있는 파기환송 사건은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가 났고, 28일 기록이 대부분 (대법원에) 송부된다”며 “서울고법 자체 판단인가. 이와 관련된 지시가 대법원에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파기환송심 사건은 무죄선고가 난 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제출했다”며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5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정치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내렸지 않나.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남평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법사위 국감에서 신상발

언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국회의원 윤리 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추천제도를 이용해 산림청장직을 ‘셀프 추천’ 했고 추천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과의 인연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를 포함해 많은 인사 분야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김현지 현재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을 정황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과 대선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여러 인사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무

슨 애길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는 김 실장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 대통령의 고비 때마다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국감 시작 당일엔 2차례나 교체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온만큼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브리핑을 내고 박정훈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 택도 없는 음모론으로 공직자를 모략하지 말라”며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신형으로 기기변경을 하라는 대리점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했지, 기계만 수령하고 업무에 바빠 기기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USIM)을 갈아 끼운 적도 없다. 약정이 끝나서 휴대폰을 최신형으로 신청한 게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법관 정원 26명으로 늘리고, 허위조작정보 근절 나선다

〈3년간〉

민주당 사개특위, 사법개혁안 발표
김기표 의원, 재판소원제 개인발의
국민의힘 “李 대통령 재판 묻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의 정원을 3년에 걸쳐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이른바 ‘4심제’로 논란이 된 재판소원제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개인 발의해 당 지도부안(案)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 사개특위안에 따르면 대법관의 수는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다. 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고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한다. 26인 체제로 구성되는 대법원에 6개의 소부(小部)와 2개의 연합부를 설치해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인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행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1개와 소부 3개로 구성돼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위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기자회견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해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은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일각에선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계산해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하는 대법관이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균등

하게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을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수 증원(10명→12명) 및 위원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평가 포함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열람 복사 전면 허용 ▲압수수색 사전 심 문제 도입 등도 당 사법개혁안으로 발표

했다.

김기표 의원은 ‘4심제’ 논란을 일으킨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위해 개인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여러 사유로 인해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심판 받도록 해 기본권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고 실질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존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며 “법원의 재판 역시 사법권의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에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안까지 발표하며 사법·언론 개혁에 시동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따르면 당은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신설 ▲불법·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 신설 ▲입증근란 손해에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 가능 ▲‘최대 5배’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 동일 책임 부여 ▲‘입찰막 소송 방지’ 특칙 규정 ▲‘최대 10억원’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악의·반복적 유통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민주당의 두 가지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정권의 흥위병 늘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 두겠다”고 했으며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두고는 “전국민을 ‘입찰막’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태홍 기자

트럼프-김정은, 판문점서 ‘깜짝 정상회담’ 가능성

APEC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
한미 간 북미대화 관련 소통 전망도

2025 경주 아시아경제협력력(APEC) 정상회의 기간에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곳에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20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판문점 특별견학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도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특별견학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문점은 유엔사 관할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으로 머무는 기간 중 김 총비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유엔사는 이에 대해 “가상 상황을 전제한 상태에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JSA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은 안전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또 미국 CNN은 18일(현지시간) 북

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방문 일정 중 김 총비서와 회동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단 북미 대화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정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깜짝 회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9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총비서에게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로부터 5시

간 여 만에 북한이 긍정적 답화를 내면서 이튿날 만남이 전격 성사된 바 있다.

문제는 북미 대화 국면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언급을 보면 한미 간 북미대화 관련 소통이 있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북미대화를 포함하여 대북정책 전반의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